



환경문제와 저널리즘

I

환경문제를 다루는 우리나라의 저널리즘의 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즉, 4공화국과 5공화국)에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보도는 사실상 제약되거나 규제되어서 진실이 은폐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6공화국에 들어와서 언론이 자유화됨에 따라서 환경문제는 보도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다루는 전문지도 많이 창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편승하여 상당수의 악덕기자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파렴치한 일부의 왜곡된 언론이 아니라도 환경문제에 대한 보도는 그 자체로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도의 자유와 정보의 정확한 전달의 견지에서 고려할 점이 많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II

이상돈 / 중앙대학교 법대교수

모든 언론, 그리고 모든 기자는 항상 “특종”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저널리즘의 속성에서 볼 때 환경문제는 매우 적절한 소재일 수밖에 없다.

사실 현대인들은 각종의 환경오염에 의하여 건

강과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식품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어떠한 물체가 건강에 나쁘다는 보도가 조금만 나가기만 하면 일반 대중은 일종의 패닉 현상을 일으켜서 그 제품을 사지 않거나 심지어는 갖다 버리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로도 이미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한 바 있는데 「콩나물 유해론」이나 「육개장 중금속 오염」 소동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일개의 학자의 실험결과가 일부의 언론에 의하여 특종으로 보도가 되어서 선의의 사업자까지도 피해를 보고 정부는 정부대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비판의 집중포화를 받고 하였다.

이러한 소동은 단순히 일파성의 해프닝일 수도 있으나 이 같은 소동이 자주 일어나면 정부의 환경·보건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언론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은 알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은 일반 국민에 사실을 알릴(inform)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기관은 결코 일반 국민을 자극하여 경악시킬(inflame)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미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일종의 방종과 타락일 것이다. 따라서, 환경 및 보건문제를 다루는 언론기관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자를 양성하여서 사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여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되 국민을 경악상태로 몰고 가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언론기관은 그 스스로 이른바 위해성의 보도에 관한 준칙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IV

수년전 미국에서는 EDB라는 농약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NBC 방송의 종합뉴스시간에 EDB

에 감염된 식품이 슈퍼마켓에 팔리고 있다고 보도한데서 비롯되었는데 이로써 미국 전역에 패닉 현상이 일어나서 슈퍼마켓에서는 EDB에 오염되었을지도 모르는 식품을 수거하는 일대의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과장된 것이었고 당시 환경청장이었던 William Ruckelshaus는 NBC-TV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였던 것이다. 그후 NBC-TV의 담당자들은 EDB 사건이 크나큰 교훈이었다고 하였으며, 이 같은 보도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V

6 공화국에 들어서서 각종의 신문과 잡지가 출간되어서 다양한 보도매체를 갖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필자는 환경·보건문제에 대하여도 몇몇 보도매체는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편중된 선입견을 거침없이 대중에 전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러한 보도매체의 담당자가 관련분야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많은 보도는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inform)하기보다는 선동(inflame)을 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이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같은 보도는 국가의 정책 결정과 수행에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 대중의 복지마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정부에서 위해성의 보도(이른바 Risk Communication)에 관한 논쟁이 한창인데 이는 과거의 방종하였던 특종주의 보도에 대한 반성인 바 우리의 보도기관도 한번쯤 자기반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